고등교육 개혁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극복의 길

2024. 10.05. (목) 오후 4시

김 명 환
(전국교수노조 전 부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등교육 개혁,
난제이지만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

대한민국의 대학 생태계는 경제 규모나 사회 발전 정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참담한 지경. 그러나 집권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 역시 과감하고 전면적인 고등교육개혁의 비전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역시 약함. 특히 개혁의 주역이 되어야 할 교수·연구자집단, 특히 정규직 교원들에 대해 안팎으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

그러나 고등교육 개혁은 우리 사회가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이며, 그 뚜렷한 명분은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임박한 미래. 대학입학연령인 만 18세 인구가 2025~2033년에 44~47만명을 오르내리다가 2034년부터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40년에는 26만명 선으로 반토막이 날 예정. 앞으로 10년이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고 재구축할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 따라서 과감한 고등교육 투자와 질서정연한 대학구조조정이 절실.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쪽으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음.

기존 대학개혁안의 비판적 검토

1) 국립대 네트워크: 2000년대 초 정진상 교수의 선구적 제안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에서 이어지는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에 관한 다양한 방안. 이는 역대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내놓은 단골 공약.

2) 공영형 사립대: 한국 대학의 80% 이상이 사학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내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함.

3) 포용적 상향평준화: 교육 평론가 이범의 안으로서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와 서울의 상위권 사립대 등 30개 대학 정도를 묶어 파격적인 대학별 지원(참여대학 교수 1인당 연구비 연 1억)을 대가로 학생 선발권을 넘겨받아 공동선발제도를 시행하여 대학 발전과 입시지옥 완화를 달성하는 방안.

기존 대학개혁안의 비판적 검토

4)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종영 교수의 방안으로서, 9개 거점국립대들에 대해 적절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서울대 수준의 파격적인 정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드는 방안. 이 사업에 서울대가 참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공약으로 채택했음.

5) 서울대를 뺀 국립대학 네트워크: 김종엽 교수의 안으로 서울대가 법인화하여 이미 국립대학 체제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공동 선발제 등 국립대 네트워크 추진은 사회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해 현실성이 없다고 봄. 나머지 9개 거점국립대에 집중투자를 하되 세종시를 국립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6)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혹은 권역별 연합대학 방안: 반상진, 임재홍 교수 등의 최근 방안. 국립대 네트워크나 공영형 사립대 방안 등이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각 지역별로 대학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연합대학을 형성함으로써 무원칙한 대학 통·폐합을 극복하고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는 안. 앞으로 더 구체화되어야 할 방안.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별 비례선발제' 비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구호로서 매력적이며 개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은 긍정적. 반면에 투입해야 할 막대한 재정("정부가 지방거점국립대에 3,600억씩만 투자하면 이들은 10년 안에 연고대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다"), 즉 연 4, 5조의 재정 부담에 비해 대학 생태계 혁신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하여 재정 낭비 위험이 크다는 반박을 넘어서기 불가능.

전면적이고 정교한 로드맵이 있어야 대학 생태계 혁신이 가능.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그대로 실행한다면, 필연적으로 재원이 한쪽으로 쏠려 대학생태계를 더 망치게 된다. 거점국립대 투자는, 1) 거점국립대를 기초학문과 많은 투자가 필요한 첨단연구 위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 2) 거점국립대의 교육과 연구가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 및 지역 대학 생태계와 유기적 연관을 맺도록 하는 혁신과 함께 가야 함. 특히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안정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임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사보타지를 경시한다는 우려가 큼. 의도와 달리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가 될 위험이 큼.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별 비례선발제’ 비판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방안(「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제안하는 제도로서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중인 지역균형선발제도를 확대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기.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

얼핏 보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시지옥을 극복할 방안. 그러나 이 제도는 소위 ‘SKY’ 등의 상위권 대학 입학제도의 불합리함을 완화할지언정, 한국 대학 생태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방안. 현재 한국 고등교육은 대학서열구조와 입시과열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투자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이 방안은 성적 상위권 학생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발상.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별 비례선발제’ 비판

교육평론가 이범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른 각도에서 비판. 그에 따르면,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의 내신 위주 대입제도와 유사하여 “경쟁이 ‘전국’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분절화되자 학생들이 체감하는 경쟁강도는 높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비례선발’을 통해 경쟁이 분절화되면 균등선발 효과는 발생하겠지만 체감 경쟁 강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서 과열 입시경쟁의 해법으로는 무의미하다고 봄.

문제의 핵심을 찌른 비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범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지지하는 약점을 보임.

(이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시민 위한 정책이다」, <경향신문>, 2024년 9월 9일)

개혁의 7대 기조

기존의 주요 대학개혁 방안은 앞에서처럼 대략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한층 더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고등교육개혁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조는 다음 7가지:

첫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청사진으로서 교육정책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정책, 산업정책, 인재육성정책,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대전환, 디지털대전환,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붕괴와 재편이라는 역사적 대변동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서울/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등 다양한 격차와 이해충돌을 조정하며 주요 과제의 개혁을 동시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한다.

넷째, 대학과 교수의 요구보다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요구를 우선하는 개혁,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공급자 중심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개혁의 7대 기조

다섯째,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톱다운 방식의 국가주의적 개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여섯째, 고등교육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 당장 OECD 평균인 GDP 1%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더라도 개혁 1년차부터 연 1, 2조 이상을 확보하고 매년 과감하게 증액함으로 주요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비유를 들자면, 낡아 무너진 다리를 새로 지을 때, 필요한 교각 10개의 예산 아닌 2개만 지을 예산을 배정한다면 새로운 다리는 영영 건설할 수 없는 법.

일곱째, 교수,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이 개혁의 주체와 동력으로서 충분한 세력 결집과 조직화를 해내지 못한 취약한 현실적 조건에서 초·중등교육운동과의 탄탄한 연대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교육이 바뀌고 대학서열구조가 해체되어야 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지옥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적으로 설득하는 동시에 (보수든 진보든) 교육감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당장 고등교육재정 확충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교육재정 증액분을 가져오는 단순한 제로섬 방식을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개혁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차원

새로운 고등교육 개혁은 첫째,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며, 둘째, 이해당사자들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탄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고통이 뒤따르는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혁신을 일관되게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난제 중의 난제.

종합적인 국가정책으로서의 고등교육 개혁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차원, 촛불혁명을 다시 일으키는 차원의 담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이를 정치적으로 번역하자면, 선거 때 투표장에 항상 나오는 부동층을 잡는 일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기성 정당에 대한 신뢰 상실이나 배신감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잠재적 지지층을 끌어낼 비전과 정책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음. 고등교육 개혁을 포함하여 개혁 성과를 신뢰하게 된 유권자가 과거보다 3% 이상 안정적으로 선거 때마다 투표장에 나오는 지지층이 되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촛불혁명의 지속이 가능할 것이다.

4대 주요 개혁 과제

제1과제: 국립대학 혁신 및 무상교육화

제2과제: 전문대학 혁신과 무상교육 확대

제3과제: 지방 사립대학 혁신 및 네트워크 구축

제4과제: 학술정책 수립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 4대 과제를 동시에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대학 생태계의 전반적 혁신.

Q: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 고등교육의 거품이 심하지 않은가?

부분적으로만 진실. 인류학자 김현경이 스위스와 비교하는 분석을 들어보자.

1999년 스위스의 25~64살 인구 중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2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7%)보다 3%포인트 가량 높음. (한국은 23.1%).

2017년 스위스의 25~64살 인구 중 대졸자 비율은 42.6%로 OECD 평균(36.9%)을 상회.

그런데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장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함. 대학 신입생의 거의 전부가 그해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와 달리, 스위스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2015년 기준 스위스 청소년이 25살 이전에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47%이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은 71%이다.

(김현경, 「대학 진학률과 '스위스 패러독스'」, <한겨레신문>, 2018년 10월 31일자.)

Q: 대한민국은 대학원도 거품이 심하지 않은가? 부실한 석사/박사를 양산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일부 부실한 대학원 운영 문제가 심각하지만, 석사 박사가 부족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을 보자.

한국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2019년 기준 69.8%. OECD 국가 중 2위. OECD 평균은 45.0%.
그러나 학문분야별 핵심 연구인력인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
(OECD 평균 15%. 스페인 17%, 이탈리아 16%, 독일 15%, 영국 15%, 미국 12%, 호주 10% 등.)

위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해 박사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박사를 채용할 대학과 연구소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임. 석·박사 고급인력의 양성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큰 장애 발생이 예상됨. 실제로 이미 많은 대학의 실험실이 대학원생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

국회 입법조사처,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제163호, 2020.12.21.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20* 에 근거한 통계 조사 결과)

Q: 대한민국의 대학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전혀 맞지 않다. 대학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가 과도하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입학정원 2,3천명이 넘는 대규모 대학들의 입학정원을 줄이되

가급적 대학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의 유지 발전에 유리함.

특히, 서울대 등 연구중심대학들은 학부 입학정원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함.

폐교해야 할 경우도 인접 대학에 통합하여 캠퍼스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해당 캠퍼스를 살리거나 용도 변경할 방안을 모색하거나 시간을 두고 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올바른 길.

난제: 입학정원이 1천명 안팎으로 줄어든 대학을 '강소대학'으로 만드는 과제.

Q: 서울/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의 격차확대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지방대학의 몰락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명백히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차원에서 거시적인 발언을 하자면, '서울/수도권 집중 극복',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분단극복', '학벌주의와 대학서열구조 타파'라는 세 과제는 실상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 맹렬한 추격형 발전 모델에서는 단기적 효율성만을 추구해 몇몇 대학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대학서열구조가 강화되고, 울산, 창원 등 소수의 지역과 더불어 서울/수도권에 자원과 혜택이 몰리게 되며, 그 배후에는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극단적인 적대적 경쟁 구조가 상수로 작용. 지방대 문제 해결은 다른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믿음이 필요. 이렇게 한반도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이므로 서울/수도권 대 지방대학의 격차 극복은 시간이 걸릴 난제.

그러나 인구절벽을 넘어서기 위해 도전을 피할 수 없는 과제.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의 연구가 밝힌 것처럼 서울은 경쟁 압력이 강해 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5. 또 서울/수도권은 과도한 비대화로 주거 비용과 생활비 상승, 교통과 물류 비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방의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이 서울/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음. 지방에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음.

Q: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가?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고등교육에 GDP의 1% 이상 사용. 우리의 경우 약 연 22조에 해당. 내년도 고등교육예산 안은 15.6조에 불과.

나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관점이 필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지난 10~15년간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따라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린 문제.

1) 근본적으로는 증세정치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

2)) 국채 발행 논의: 일본의 무이자 학교채 발행 제도는 일종의 기부운동이며,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송기창 교수). 우리는 대학의 사회적 신뢰가 낮아 학교채는 어렵고 국채 발행이 타당. 정부 재정 운용의 구조조정이나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전까지 과도적으로 국채 발행이 바람직.

3) 고등교육 재정의 압박 감소: 대학에 입학할 학령인구가 줄어 국가장학금 등에 여유가 생김.

4) 기업인 상속세 연동 대학 기부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 모색: 기업인이 상속 주식을 지방대학에 신탁하고 상속 주식의 배당금을 20년 동안 대학 R&D에 투자한 후, 신탁 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는 제도 도입.

Q: 학령인구 급감으로 여유가 생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돌리면 충분하지 않은가?

안될 말이다.

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배정하는 현행 법률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는 존재하지만,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정을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가는 현 정부의 정책은 그릇된 것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음.

학령인구가 감소한다지만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구감소로 사람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더욱 늘어난)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한 1대1 맞춤교육을 강화해야 함. 또 이주노동자/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정 출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개인지도, 맞춤형 교육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원만한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도 대규모 증액이 필요.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와 고등교육재정 확보 노력은 별개로 추진해야 함.

Q: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국립대학의 자기혁신은 과연 가능한가?

9개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국립대가 가진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 정부의 국립대에 대한 책임 등을 생각할 때 국립대에 대한 우선적이고 전면적 투자 확대는 당연.

신분이 안정된 국립대학 교수진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혁신에 나설 가능성이 적은 집단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국립대학 지원이 교수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었음도 명백한 사실.

대학의 주된 임무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주역인 교수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이 절실.

Q: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국립대학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학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 (2015년 부산대 고 김현철 교수의 희생.)

당장 정부 지원을 사업비 형태가 아닌 일반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되 정부-대학-교수진이 합의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3~5년 주기의 평가를 통한 지원액 가감 등으로 책임성 확보가 바람직.

또한 다음 몇 가지를 대표적 혁신 지표로 제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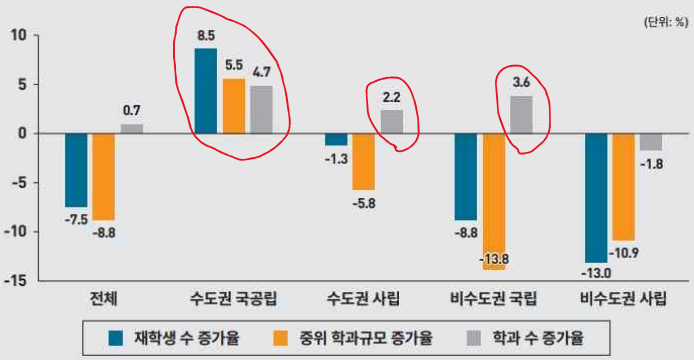
1) 학과(학부) 단위의 통합을 통한 규모 키우기: 현 정부의 무전공 입학제 강요에 대한 대안

2) 응용학문/인기학문의 학부 입학정원 과감한 폐지 및 전반적인 입학정원 감축

3) 기초학문, 첨단연구, 지역에 맞는 학문이라는 3가지 기준에 맞는 자기혁신

대학 유형별 학과 수 증감 현황(2014-2021)

[그림 3] 일반대학의 재학생 수, 중위 학과규모, 학과 수 증가율(2014~21년)



주: 중위(中位) 학과규모는 학과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통계 주요 현황」, 각년도.

국공립대학의 대학별 학과 수 현황(2022)

순위	대학명	학과 수	순위	대학명	학과 수
1	강원대	161	16	한경대	72
2	경북대	145	17	순천대	70
3	경상국립대	141	18	군산대	61
4	전북대	140	19	창원대	58
5	전남대	130	20	한밭대	57
5	공주대	130	21	강릉원주대	54
7	부경대	126	22	서울시립대	53
8	부산대	117	23	안동대	52
9	서울대	112	24	서울과학기술대	45
10	충북대	99	25	한국해양대	43
11	충남대	97	26	금오공과대	35
12	제주대	89	27	한국교원대	25
13	한국교통대	86	28	목포해양대	12
14	목포대	77	29	한국체육대	10
15	인천대	73			

학사운영단위 혁신: 무전공 입학제의 대안

현 정부의 교육부가 강요하고 있는 무전공/무학과 입학제의 단순한 철회 요구는 비현실적.

1) 이미 많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무전공 선발제를 확대해왔으며, 그외에도 복수전공 의무화, 다전공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무전공 선발제를 확대 중.

2)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진보개혁진영도 국립교양대학설치안이라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낸 바 있음. (톱다운 방식의 국가주의적 개혁안이라는 한계가 뚜렷했음.)

3) 공급자 아닌 수요자 위주의 개혁이라는 기조를 지키는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필요.

기본 방향: 학과/학부라는 기본적인 학사운영 단위의 규모 키우기.

소속 교원의 숫자를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권 넓히고 교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다양하고 나은 연구, 여러 전공이 협업하는 융복합연구를 할 여력을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 또한 다음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학사운영단위 혁신: 무전공 입학제의 보완책

첫째,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교양교육/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어국문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등의 학과나 기초교육원/교양교육원 등의 기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경영학과 등 상경계 학과의 학부 입학정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취업 전망이 밝은 상경계 전공을 많이 택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계열의 학부 입학정원을 없애더라도 해당 전공의 교수들에게 큰 불이익은 없다. 이런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대해 합당한 정부 지원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유기적 연관성 부족, 흔히 말하는 '미스매치'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전반적인 산업정책, 인재양성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직업 전망을 가능한 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Q: 비리사학/한계사학이 많은데 대학 재정지원 확충은 과연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비리사학/한계사학이라고 하여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영을 잘못한 이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을 죄 없는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떠넘기는 잘못된 정책.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학 운영진 지원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함.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해야만 사학 비리의 척결이 가능해짐. 정부 지원이 없거나 불충분할 때 공공성을 지닌 고등교육기관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사학의 입지는 더욱 강해짐. 공영형 사립대 개혁안의 취지를 상기할 필요.

더불어 대학 비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감사할 '상설감사단'을 변호사, 회계사를 포함하여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교육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기구로 설치해야 함.

Q: 왜 전문대학 투자와 혁신을 우선해야 하는가?

첫째, 대한민국의 성공은 우수한 노동 인력이 제조업 분야에서 부단히 혁신을 이룩하며 거둔 성과에 기반한 것이었고, 최근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붕괴하면서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국제 정세 앞에서 제조업의 유지와 혁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

둘째, 남달리 강한 학벌주의와 능력주의 등 우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사이에 부당한 위계질서가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 선진국일수록 그러한 위계질서는 찾기 힘들며, 더구나 기술교육, 고등직업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은 세계적 대세. 예를 들어, 시장주의가 강해 무상교육에 부정적인 미국도 30개 주 이상에서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며(물론 커뮤니티 칼리지가 우리의 전문대학과 정확히 상응하는 것은 아님), 나머지 주에서도 무상교육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

셋째, 우리는 역사가 깊은 국공립 전문대학들이 오래 전에 4년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탓에 거의 모든 전문대학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 이 점에서 대학 무상교육이 시작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청년들이 주로 다니는 전문대학이 우선 순위에 놓여야 함.

Q: 전문대학의 위상은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가?

'고등직업교육'의 위상 재정립 필요: '고등직업교육'은 고등교육 연구와 담론에서 전문대학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법률에서 사용되는 정식 용어는 아님. 「고등교육법」 제37조는 산업대학, 제55조는 기술대학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 전문대학은 제47조("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규정.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법률적 근거를 둔다. 한국폴리텍대는 1968년 중앙직업훈련원으로 출범했다가 1998년 기능대학 24개와 직업전문학교 21개의 통합을 통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출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의 제2조(정의) 5항(""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강조는 필자)이 폴리텍대의 법적 규정이며, 이 조항에 따를 때 폴리텍대는 전문대학의 범주에 속함.

'고등직업교육'이 법률 용어로 채택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등의 규정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장기적으로 이들 대학들의 규정과 상호관계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정립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할 필요가 절실.

Q: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일반대학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의 구분을 없애고 지방사립대의 구조개혁 작업을 전문대와 함께 엮어 고등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일도 진지하게 검토할만함. 사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구별은 이미 붕괴.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의 실용적 전공을 침범하는 경향에 더해 전문대학도 간호학과 등 일부 전공에서는 이미 3년제, 4년제를 실행 중. 차제에 일반대와 전문대를 위계질서로 바라보는 기성의 틀을 타파하면서 지방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함. 경쟁력을 상실한 지역의 일반대들이 과감하게 '고등직업교육'의 틀 아래에서 자체혁신 도모가 유력한 방안.

이 과정에서 '고등직업교육'의 개념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동시에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의 관점에서 특정 전공의 교육과정이 2년/3년/4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평가하여 지역의 전문대학/폴리텍대가 수행할 고등직업교육을 현실에 맞게 재편할 필요.

특히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상 재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함.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폴리텍대학까지 포괄하는 '고등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절실.

Q: 세금을 써야 할 급한 곳이 많은데 왜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해야 하는가? 고등교육의 비용은 그 수혜자가 부담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지식기반 경제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우수한 인력이 더욱 긴요하여 고등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짐. 그러나 우리 대학은 고급인력 양성에서 실패하고 있음. 이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국가정책, 사회정책의 문제.

대학 무상교육을 확대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수한 젊은이가 좋은 대학을 택할 수 있어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노리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앞서도 말했듯이 기술교육, 고등직업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 규범.

대학 무상교육은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자기실현과 행복 추구에 기여.

인구급감이 '정해진 미래'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나 난민의 우수한 자녀들이 쉽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며, 개발도상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

물론 대학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잠재수요, 가수요가 현실화되는 거품 발생이 예상됨. 그러나 이는 엄정한 학사관리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음.

Q: 대학 무상교육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흔히 오해하듯이 대학 무상교육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사회와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

더구나 21세기의 시점에서 대학 무상교육은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의 기본권.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무상교육의 실질적 효과: 무상교육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비싼 등록금을 낸 학생이 학업에 등한하거나 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쉽게 낙제시키지 못하는 것이 대학과 대학 교수의 잘 알려진 비밀이다.

무상교육은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쉽다"는 한국 대학의 오래된 병폐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된다. 국민 세금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주는데, 노력하지 않거나 능력이 안되는 학생은 빨리 다른 길을 찾도록 하는, 바람직한 경쟁 문화가 대학 캠퍼스에 안착할 수 있다.

Q: 왜 현재의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사학구조개선법'을 반대하는가?

법률 제정의 절실함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 현재의 법률안은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주요 문제점만 지적하면,

1) 과거에 발의된 법안들에 비해 사립대의 통폐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대학 구조개선 기본 계획의 문제의식이 없다. 따라서 무원칙한 대학 폐교와 법인 해산이 이뤄질 위험성이 큼. 말을 바꾸자면, 매각 가치가 높은 '노른자위' 토지와 건물을 가진 대학 법인들이 서둘러 해산할 가능성마저 존재.

2) 실제 이 법에 따라 사립대 통폐합을 활성화해도 대학입학정원 감축 효과는 제한적:

2040년의 만 18세 장래인구추계가 25만 9,004명에 불과하며, 내년 2025년 대학 입학정원이 34만 934명. 대학 진학률을 70%로 잡은 단순계산으로도 15년 후에는 현재 입학정원의 47% 이상, 즉 거의 절반인 16-17만명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

'사학구조개선법'에 따라 입학정원 2,000명의 대학 40개를 없앤다고 가정하더라도(사실상 불가능한 가정!) 줄어드는 입학정원은 불과 8만명. 나머지 8-9만명을 줄이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즉, 지금은 서울/수도권/지방, 국공립대/사립대가 골고루 입학정원을 30~40% 정도 대폭 줄이는 대개혁이 필요.

Q: 해산장려금 도입으로 운영이 어려운 사학을 쉽게 폐교하도록 도와야 이들 대학이 '좀비 대학'으로 남아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에 끼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은가?

한계 사학을 폐교나 해산 허용을 통해 정리하려는 것은 하수. '사학 소유주'들은 그렇게 만만한 집단이 아니며, 이들은 사학구조개선법을 악용하여 최후까지 버틸 것임. 당장 사학구조개선법률안의 부칙 제2조(유효기간)은 10년의 효력을 정하고 있지만, 이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사학법인이 폐교 또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직원 보수 삭감이나 일방적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결국에는 해산하지 않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음. 실제 이런 식의 '위협'은 지금 다수의 지방대학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임. 따라서 법 통과 시점에서 3년 정도만 효력을 가지도록 변경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 법 통과에 앞서 한계 사학들을 대상으로 해산 의사 여부를 정확히 실태조사할 필요가 절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비공식적 조사 결과로는 과도한 수준의 해산장려금 보장 없이는 해산 의사가 없는 사학이 대부분이었다고 함.)

결론적으로,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대학들 간의 통합의 길을 여는 등, 대학 입학정원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하지만 폐교의 숫자는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 불필요한 캠퍼스도 시간을 충분히 들여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이 필요. 대학은 폐교를 결정하는 순간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매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미 경험으로 입증됨.

Q: 문화·학술강국으로의 도약이란?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과학기술입국'의 슬로건을 걸고 경제 건설에 성공했으며, 이는 성공적인 추격형 모델의 상징과도 같은 슬로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역시 '과학기술입국'은 등장.

그러나 이제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 모델로 탈바꿈하기 위해 새 슬로건이 필요.

자연과학, 공학, 의학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모든 학문이 고루 발전하는 것이 문화·학술강국. 이는 최근의 '한류'와 한국어 붐이 그 가능성을 이미 입증.

마침 2043년과 2046년은 각각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반포 600주년: 지금까지 설명한 고등교육 개혁, 즉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와 질서정연한 대학구조조정"을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함을 통해 우리는 "젊은이의 나라, 젊음이 행복과 기회인 나라, 모두가 젊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 고등교육 개혁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반포 600주년에 이르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문화대국", 문화·학술강국을 건설할 수 있음. 이는 촛불혁명의 완성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음.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세 가지 슬로건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와 질서정연한 대학구조조정"

"젊은이의 나라, 젊음이 행복과 기회인 나라, 모두가 젊은 나라"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문화대국"

4대 주요 과제 수행의 비용 추계

4대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추계로서 2단계 총 6년에 걸친 예산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최소한의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것.

예산 확보의 현실성을 위해 각 주요 과제 당 예산은 연차별로 항목마다 일정하게 조정 가능.

1단계 3년의 최종 3년차 예산 증액 목표액이 2조 4,800억, 2단계 3년의 최종 3년차 연도 예산 증액 목표액은 약 5조 3,400억에 달하며, 3단계인 최종 단계에 OECD 평균인 GDP 1.1%에 육박하는 예산 확충(연 23~25조)을 함으로써 개혁 완수. GDP 1%는 2023년 기준 약 22.4조이고, 교육부가 밝힌 내년 2024년 고등교육예산은 15.6조. 즉, OECD 평균 달성을 위해서도 최소 연 6.8조를 늘려야 함.

4대 주요 과제 수행의 비용 추계

고등교육예산을 확충하는 작업에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 소요 재정과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함. 개혁 1년차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예산 증액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정부 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최소한 1년의 시간을 두고 진행할 필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이라도 반드시 진행할 일.

둘째, 확보되는 재정에 따라 선택 가능한 복수의 시나리오 내지 로드맵을 정해야 한다. 고등교육 개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위한 재정 확보는 쉽지 않으므로, 연 2조 증액이 가능할 때와 3조 증액이 가능할 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개혁 시나리오를 준비. 4대 주요 개혁과제는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미룰 수 없으며, 확보되는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집권세력의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함.

고등교육 개혁 비용을 이해하는 손쉬운 계산 방법 (1)

앞에서 2040년까지 현재 대학 입학정원의 절반 가까운 무려 16만명 정도를 줄여야 함을 지적.

이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추계: 5조 1,200억 (5,120,000,000,000원)

(추계 근거 연간 등록금 8백만원 x 16만명 x 4개 학년) * 등록금 연 8백만원은 넉넉히 잡은 것임.

단순하게 가정하여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5조 1,200억을 확보하여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을 전액 보전해주고 각 대학이 현재의 교수진과 교육 여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모든 대학이 교수/학생 비율을 2배 이상 개선하게 되며, 다른 교육 여건도 그만큼 나아질 것임.

단순무식한 계산법이지만,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와 당위성을 손쉽게 이해하는 방법^^

그러나 무상교육 확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 재정 확충으로는 불가능.

고등교육 개혁 비용을 이해하는 손쉬운 계산 방법 (2)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정은 보고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홍성학 교수 등의 최근 계산을 참조하면, 최종적으로 약 5조 4,000억원(국립대 4,000억 원, 전문대 1조 5,000억 원, 지방 사립대 3조 5,000억 원)이 필요.

둘을 합치면 10조 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

그러나 입학정원 감축은 지금부터 15년 이상 단계적으로 실행하므로 5조 1,200억은 최종 단계에 드는 비용. 시작은 단 몇 천억으로도 충분. 더구나 일부 한계사학의 폐교로 장기적으로 재정 투입액이 추가로 감소함.

대학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행하며, 재정 여력에 따라 사립대는 실질적 반값 등록금으로 목표 하향 가능.

반면에, 연구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별도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 항목도 존재. 대표적으로 1) 대학원생의 등록금 면제와 생활장학금 지급, 2) 비정규교수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 3) 연구개발비 증액 등.

이 항목들에 대해 개혁 과정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여 예산 증액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 항목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개혁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므로 불가.

요컨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연 23-25조) 확보를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함.

개혁 1단계(1-3년차): 최종 예산 목표액 연 2조 4,800억

제1과제

9개 거점국립대(200억 x 9개 대학)	1,800억
다른 국립대(30억 x 28개 대학+100억)	1,000억
국립대 학부 무상교육	4,000억

*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하게 조정. 거점국립대 연 200억은 편의상 현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의 지원액을 기준으로 설정.

* 학부 무상교육의 일부 예산은 국가장학금 예산 중 학생 수 감소로 남는 예산으로 충당 가능.

* 거점국립대든 여타의 국립대든 재정지원 확대에 발맞춰 응용학문 폐지/축소, 기초학문/첨단연구/특성화에 맞는 대학 혁신, 입학정원 감축 등을 해야 하며, 3년간의 개혁 성과가 부진할 때는 개혁 2단계에서 지원 삭감할 수 있음. 거점국립대의 내부 개혁 내용은 '보론'의 서울대 개혁을 참조할 수 있음.

* 1단계 3년의 성과 평가는 교원 확보율 향상, 비정년/비정규교수 차별 시정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

개혁 1단계(1-3년차): 최종 예산 목표액 연 2조 4,800억

제2과제

전문대 재정지원(25억 x 100개 대학+500억)	3,000억
전문대생 등록금 감면	5,000억

* 재정지원은 교원 확보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쓰도록 제한.

* 2023년 기준 전문대학생 수 509,169명, 평균 등록금 연 650만원, 등록금 총액은 연 3.3조. 여기에 5,000억원을 투입하면 약 15%의 등록금 경감 효과. 단, 이 예산을 국가장학금과 달리 대학을 통해 집행하게 함으로써 대학별 특성화, 우수학생 양성에 활용하도록 모색. 두 항목 모두 비리부실대학에는 지원 제한할 수 있음. 또 등록금 경감이 학사관리 강화와 함께 가도록 함.

개혁 1단계(1-3년차): 최종 예산 목표액 연 2조 4,800억

제3과제

사립대 재정지원(강원/충청/호남/영남 4개 권역별 평균 2,000억)	8,000억
수도권 사립대 재정지원	500억

* 수도권은 특성화 성과가 뛰어나거나 취약한 지역의 전문대학(들)에 지원.

* 권역별 지원액은 대학 및 대학생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권역 내 각 대학의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 특히 자율적인 대학연합체제 구축에 따라 연합대학별 지원을 우선.

* 사립대 역시 대학 혁신 및 입학정원 감축 성과에 따라 개혁 2단계에서 지원 증감 가능.

제4과제

인문사회 학술예산	1,500억

* 일단 현행의 1.5배로 증액함으로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제도 확대 등 실행

개혁 2단계(1-3년차): 최종 예산 증액 목표 연 5조 3,400억

제1과제

9개 거점국립대(400억 x 9개 대학)	3,600억
다른 국공립대(50억 x 30개 대학)	1,500억
국립대 학부 무상교육	4,000억

* 예산 확보에 따라서는 국립대 대학원생의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 개시. (이 표에서는 생략)

제2과제

전문대 재정지원(100억 x 100개 대학)	5,000억
전문대생 등록금 감면	1조

* 2단계의 전문대 재정지원은 교원 확보 및 교육 여건 개선 외에 교원 급여의 정상화 및 비정년/비정규교수 차별 시정에 40~50% 이상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음. 등록금 15%의 추가 감면 효과. 국가장학금 혜택까지 포함하면 무상교육에 근접.

개혁 2단계(1-3년차): 최종 예산 목표액 연 5조 3,400억

제3과제

사립대 재정지원(강원/충청/호남/영남 권역별 평균 4,000억)	1조 6,000억
수도권 사립대 재정지원	1,000억
지방 사립대 등록금 지원	1조 이상

* '지방 사립대 등록금 지원'은 2단계의 새로운 지원 항목: 지방 사립대 등록금 인하로 지방 국공립대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단, 국가장학금과 달리 대학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대학 특성화 등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가령,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전공 학생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 수도권 사립대 재정지원은 자발적 입학정원 감축 성과를 우선적 지표로 함.

* 지방 사립대 역시 재정지원을 교원 확보 및 교육 여건 개선 외에 교원 급여의 정상화 및 비정년/비정규교수 차별 시정에 40~50% 이상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함.

개혁 2단계(1-3년차): 최종 예산 목표액 연 5조 3,400억

제4과제

인문사회 학술예산	3,000억
거점국립대 대학원생 생활장학금(기초학문 전분야)	4,000억

* 기초학문 박사과정생에 대해 5년간 생활장학금 지급하면, 1인당 1억 800만원(월 180만원 x 60개월) 소요. 기초학문 전분야에 걸쳐 연 2천명을 선발하면, 1년차에 432억, 최종 5년차에 2,160억 예산 필요. 그러나 생활장학금에는 당연히 등록금 전액 면제가 따라야 하며, 선발 인원/지원액을 늘릴 필요, 논문장학금(dissertation fellowship) 등 우수한 논문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이 더 필요. 또 일부 전략적 응용학문에도 지원이 필요하며, 우수한 사립대의 대학원 프로그램이나 중소국립대 지원도 요구됨. 따라서 실제 4,000억의 예산도 부족. 반면에 이 공계는 이미 생활장학금에 해당되는 혜택이 있어 예산 절감 요인도 존재.

서울대 개혁에 따르는 예산(*서울대가 개혁에 동참할 경우의 소요 예산). 300억

* 서울대에 대한 현재의 정부 지원은 동결하거나 적절하게 삭감해야 함.

개혁 3단계(7년차 이후):
최종 예산 증액 목표 연 7~10조 이상 (GDP 1.1% 이상)

앞의 개혁과제들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 다음 사업 추진.

1) 전문대학 등록금 완전 무상화.

(가능하면 일본과 같은 급부형 장학금(생활장학금) 도입)

2)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무상교육 완성

3) 거점국립대 대학원 생활장학금 확대

4) 비정년교원/비정규교원의 대폭 감축 및 공정한 처우 달성

5) 연구개발비 확대

보론: 서울대 개혁 방안

서울대 학부 중 인문대/사회대/자연대/공대/경영대/농생대/사범대/생활과학대/자유전공학부/첨단융합학부의 10개 단위는 학부 입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9개 거점국립대학에서 편입생을 받아 교육하여 졸업시킨다.

자격증을 받는 등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의 성격을 띠거나 독자적인 특징이 분명한 의대/치대/간호대/약대/수의대/음대/미대의 7개 단과대학은 당분간 현행 입학정원을 유지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저항과 혼란을 최소화.

7개 단과 대학의 입학정원이 총 60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외하더라도 3,000명 가까운 학부 입학정원 축소 가능.

보론: 서울대 개혁 방안

개혁 시행 2년차부터 편입생을 받기 시작. 제도 도입으로 신입생을 받지 않아 생기는 재정 손실 및 현 입학정원을 80%로 감축하는 개혁에 따른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보장.

9개 거점국립대학 학생 중에서 1학년 말과 2학년 말 두 번에 걸쳐 정원의 50%를 나눠 편입생을 받음. 편입생의 기본 자격 기준은 소속 대학 성적순 상위 25-30% 정도로 폭넓게 잡아 대학 입학 후의 소모적인 학점 경쟁을 방지하고,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발함으로써 서로 다른 대학의 성적 동등성 시비나 지원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열패감 등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방지. 사회적 논의에 따라 편입생 범위를 국립대 전체로 넓히거나 일부 사립대 포함도 가능.

편입생을 뽑는 모집 단위 설정이나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은 서울대의 자율에 맡기되 될수록 광역으로 추첨 선발하도록 함.

보론: 서울대 개혁 방안

- 소속 대학의 학업 내용 등을 면접에서 파악하여 성적이 되더라도 자격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장치 도입 여부를 검토.

- 서울대의 자율적 논의에 따라 최소 학력 기준을 전공에 따라 수학, 물리, 영어, 외국어 등에서 설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사회대 편입생은 텝스 최소 600점, 자연대 편입생은 수학/물리 공인시험 최저 기준 설정,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일본전공은 공인일본어시험 기준 설정 등등. 그러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불허하며, 경쟁률이 있을 경우 추첨 선발의 원칙은 흔들릴 수 없음.

- 각 학과의 편입생 선발 기준도 기본적으로 자율로 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2외국어학과의 경우, 중국어/일본어/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 등 해당 외국어를 일정하게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으로 받아 지금보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서울대로 편입하기 위해 반복하여 편입 지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필요. 예컨대, 총 2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설치.

보론: 서울대 개혁 방안 QnA

1) 서울대 입학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편입생도 받지 않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 아닌가?

서울대가 진정한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려면 작은 규모의 학부와 학부교육은 필수. 인문사회계 대학원생이 학위를 위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부 수업 조교 등을 하면서 교육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하며, 이공계 대학원생도 학부 실험실습 지도 등은 필수 과정. 교수 역시 학부생을 가르치거나 교양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불가결. 학부 없이 특정한 주제에 천착하는 대학원대학교와 종합적 연구중심대학은 다름.

2) 거점국립대든 주요 사립대든 편입을 원하는 학생이 편입 정원에 미달할 염려는 없는가?

거점국립대 학생들은 서울대의 우수한 인프라의 혜택 때문에 많이 지원할 것이 확실. 그러나 국립대 입학생의 수준이 낮다는 사회적 평판 때문에 상위권 사립대 입학생들이 서울대 편입을 외면하는 현상은 분명히 벌어질 것.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서울대 대신 연고대 등이 대학서열구조의 정상을 차지하리라는 예상은 입학생 성적 기준으로는 상당 기간 타당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대가 가진 엄청난 자원과 유리한 여건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는 빗나간 비판.

3) 이 개혁안이 서울대 위주라서 거점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반발을 부를 염려는 없는가?

거점국립대의 입장에서는 추첨 선발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수 학생이 서울대로 빠져나간다는 불만이 나올 것임. 그러므로 제1과제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립대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 이것이 제1과제를 서울대 개혁의 선결 과제라고 말하는 이유.

감사합니다!

끝